

국힘,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속도전

오늘 상임전국위·3일 전국위 열어
당헌·당규 개정 작업 마무리 방침
만만치 않은 당내 반대 여론 걸림돌
권성동·이준석 동반 사퇴론도 부각

능성과 함께 정진석 국회의장 등 대선 중진 의원들도 두루 거론된다.

그러나 새 비대위가 무난히 안착하기까지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박수'로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당내 반대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표결까지 부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재결 의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 비대위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의 사퇴 결정은 여전히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지만, 전날 의총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전국위 부의장인 윤두현·정몽만 의원이 사회권 등을 이어받아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한 뒤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의장이 지난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를 띄우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한 만큼, 추석 전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이다.

특히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지난 31일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향후 국민의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전국위 소집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당의 정상화 시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길을 터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주말인 오는 3일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의 1차 관문인 당헌·당규 개정부터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지난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임전국위원들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중 소집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위원 4분의 1 찬성으로 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상임전국위를 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일 상임전국위를 연 뒤, 곧바로 전국위 소집 공고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달 3일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최종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헌·당규 개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지명 절차로 이어진다. 당 일각에선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시즌2'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

능성과 함께 정진석 국회의장 등 대선 중진 의원들도 두루 거론된다.

그러나 새 비대위가 무난히 안착하기까지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박수'로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당내 반대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표결까지 부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규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가급적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재결 의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를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 비대위 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의 사퇴 결정은 여전히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지만, 전날 의총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의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전국위 부의장인 윤두현·정몽만 의원이 사회권 등을 이어받아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한 뒤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박우량 신안군수,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취임

“지방자치 활성화·균형발전 노력”



협의회는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배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협의회 운영을 다짐했다.

박우량 신임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토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가 민선8기 상반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0일 영암군 현대 호텔에서 민선8기 상반기 협의회장으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추대했고, 실무를 지원할 사무총장에 김철우 보성군수를 선임했다.

22개 시군은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과 전남도 및 중앙부처 건의 안전 9건을 의결했다.

지방정가

광주시의회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채은지 의원 선임



정적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비례)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나운·박미정·심장욱·심철의·이명노·임미란·홍기열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채 위원장은 "노사상생협력의 광주형일자리를 탄생시킨 광주의 노사관계 현주소를 파악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가 노사상생과 일터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이하 새노동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노동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노동특위는 향후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광주시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인식 파악을 시작으로, 광주형일자리 점검과 중대재해 예방 등의 노동현안 해결과 미래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귀순 시의원 "금융복지사업 더욱 확대해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채무자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광산구 금융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채무조정이나 부실채권에 대해 탐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광산구 주민에게만 국한돼 있어 안타깝다"며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광주시 차원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광산4)은 31일 "광주 지역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금융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채무회생행복상담센터'가 단순상담과 제도 안내에만 그치고 있다"며 "채무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박필순 시의원 "탄소중립, 과감한 정책 필요"



에 탄소중립 정책 추진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집행 ▲기후환경교육의 전면화 ▲에너지 전환마을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확대 등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필순 의원, 부위원장에 최지현 의원을 선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3)은 31일 "기후재난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보다 5년 앞선 광주시의 탄소중립도시 선언을 언급하면서 "광주시가 오는 2045년까지 목표로 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4가지 안을 제안했다. 4대 제안은 ▲광주시 행정 전반

검찰, 위례신도시 수사... 호반건설 등 20여곳 압수수색

성남도개공 정보유출 등 비리 의혹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보다 앞선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를 다시 살펴

보던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들 사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맡은 호반건설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천713㎡에 1137가구를 공급했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고 2016년 마무리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 '대장동팀의 사전 모의고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사전에 우선협상자를 결정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3년 11월 11일 참여업체 공모를 마감했고, 다음날인 12일 미래셋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처럼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위례신도시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